

활짝 열린 의회



공주시의회 하반기 첫 번째 임시회 마무리

‘행정수도의 조속한 완성과 공주시와의 상생발전 촉구 결의문’ 채택



공주시의회(의장 이종운)는 7월 31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2개의 안건을 처리한 뒤 하반기 첫 번째 제22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종운 의장은 폐회사에서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스톱 민원처리’와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도 평가제’를 집행부에 제안하였다. 7월 27일에 개최하여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는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

고,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외 9건은 원안 가결,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수정 가결하였다. 또한 이종운 의장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의 조속한 완성과 공주시와의 상생발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종운 의장은 “공주시는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인구 5846명, 면적 76.1km²와 다수의 기관과 기업체가 편입되었고, 출범 후부터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등 인구 소멸 위험도시의 위기에 봉착했다”며 “행정수도권을 공주시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주시와의 상생발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행정수도 완성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제2의 과밀화 문제 등의 해결 방안임을 직시하고 행정수도를 조속히 완성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수도의 조속한 완성과 공주시와의 상생발전 촉구 결의문

공주시는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인구 5846명, 면적 76.1km²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한국영상대학교, 남양유업 등 다수의 기관과 기업체가 편입되었고, 출범 후부터 지금까지 1만7천여 명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등 인구 소멸 위험도시의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공주시의회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행정수도권을 공주시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주시와의 상생발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행정수도 완성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제2의 과밀화 문제 등의 해결 방안임을 직시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공주시까지 확대·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공주시가 세종특별자치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공주시-세종특별자치시 양 시는 상생협력력을 위한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과제를 발굴·추진하여 양 시의 우호적 관계를 공고히 할 것을 촉구한다.

공주시의회 의원 일동

제220회 임시회 조례안건 처리 현황

조례명	주요내용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조리 행위 신고 대상자의 범위 및 부조리 신고기한을 정비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대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및 시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 중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확대 신고기한 2년을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 만료일(3년)로 확대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민간 분야에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분야: 포괄적인 재난관리활동에 사용 가능 민간분야: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로서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공주문화재단을 설립함에 있어, 조례로 설립목적,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등을 규정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등)가 신설됨에 따라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2018. 9. 환경부)」에 축산농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처리비용을 정하도록 함 <table border="1" data-bbox="507 1348 1396 1585"> <thead> <tr> <th rowspan="2">부과대상</th> <th rowspan="2">부과기준 (ℓ)</th> <th colspan="2">수집운반비(원)</th> <th colspan="3">처리비(원)</th> </tr> <tr> <th>2021.1.1. 부터</th> <th>2023.1.1. 부터</th> <th>2021.1.1. 부터</th> <th>2022.1.1. 부터</th> <th>2023.1.1. 부터</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가축분뇨 배출시설</td> <td>허가대상</td> <td>1</td> <td>7</td> <td>8</td> <td>6</td> <td>8</td> <td>10</td> </tr> <tr> <td>신고대상</td> <td>1</td> <td>7</td> <td>8</td> <td>4</td> <td>6</td> <td>7</td> </tr> <tr> <td>규제미만</td> <td>1</td> <td>7</td> <td>8</td> <td>1</td> <td>1</td> <td>1</td> </tr> </tbody> </table>	부과대상	부과기준 (ℓ)	수집운반비(원)		처리비(원)			2021.1.1. 부터	2023.1.1. 부터	2021.1.1. 부터	2022.1.1. 부터	2023.1.1. 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1	7	8	6	8	10	신고대상	1	7	8	4	6	7	규제미만	1	7	8	1	1	1
부과대상	부과기준 (ℓ)			수집운반비(원)		처리비(원)																													
		2021.1.1. 부터	2023.1.1. 부터	2021.1.1. 부터	2022.1.1. 부터	2023.1.1. 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1	7	8	6	8	10																												
	신고대상	1	7	8	4	6	7																												
	규제미만	1	7	8	1	1	1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빈집정비(활용)를 통한 도심 활성화, 범죄예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집 철거는 3년 이상 공공용지 제공 빈집 활용은 주변시세의 80퍼센트 이하 등 3년 이상 제공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입주 관련법에 의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활용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면서, 나아가 민·관 협치를 통하여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주푸드지원협의회 신설, 먹거리관련 심의기구통합 일원화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하는 공주시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 																																		

※ 자세한 조례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정 발전 유공자 표창

일반 시민 24명 표창패 수여



공주시의회가 2020년 전반기 의정 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는 남다른 애향심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시민 24명이 유공자로 선정되어 표창패를 받았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의원들은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종운 의장은 “의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시민 여러분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공주시의회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주민 여러분들께서 더욱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 발전 유공자 표창은 지방의회 운영과 의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여 시민들의 의정 참여를 유도하고 수상자의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하여 선진의회를 구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법률고문 위촉

법률수요에 전문적인 지원

공주시의회가 법률수요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자 법률고문을 위촉했다.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황윤상 변호사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공주시 지체장애 인협회 고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시의회 법률고문은 ‘공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의회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종운 의장은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 법률 자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에 위촉한 고문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고문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신을 되돌아보며

이종운
공주시의회 의장



지난 8월 15일은 제75주년 광복절이었다. 우리나라의 광복의 주축인 임시정부는 1919년 3·1만세운동 전후로 국내외 여러 이름으로 수립됐으며 1919년 9월 여러 지역에 흩어져있던 임시정부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됐다. 본 의장은 작년 9월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의 이동 경로를 따라 선열들의 고난을 겪었던 길을 체험하고 관리 실태를 확인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3·1만세운동으로 단결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이며, 3·1만세운동 이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제강점에 항거하기 위해 조직되어 조국 광복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독립운동의 구심체로 일제와 끈질기게 저항했다. 이처럼 임시정부는 3·1만세운동을 계기로 태동한 독립운동의 중추기관으로서 일제의 탄압과 방해 속에서도 애국정신을 발휘하여 끝내 조국 광복을 이루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선언한 민주공화정부로서 우리나라 민주 헌정사의 시작이기도 하다. 이 정신을 이어받아 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의의를 되새기는 것은 결코 지난 역사의 한 사실을 회고하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현재·미래는 단절된 것이 아니며 언제라도 우리가 역사를 잊으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임시정부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부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코로나19를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대처 능력을 찬사하고 있으며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마스크 5부제 등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나라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본받아 극복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지혜를 발휘했다. 지금껏 무에서 유를 창조해온 우리 민족의 자신감과 저력으로 현재의 코로나19 위기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정신을 본받아 언제나처럼 국난을 기필코 이겨낼 것이다.

기고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목적은 지역균형발전이다!

이상표
공주시의회 의원



지난 7월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울, 수도권 과밀화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모든 정부부처가 이전하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어 7월 23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행정수도의 실질적인 완성을 위해서는 인구 200만 이상의 광역도시 기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종시와 대전시의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공주를 지역구로 둔 정진석 국회의원은 7월 25일 세종시에만 국가기관을 배치하면 주변 지역은 상대적 박탈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행정수도 계획을 세종시 주변까지 확대한 이른바 ‘세종 메가시티’로 수정 보완하자고 제안하였다.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보니 공주시의 목소리를 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공주시는 세종시 출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지자체다. 세종시 출범 당시 공주시는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인구나 토지, 많은 기업체, 학교 그리고 기관 등을 세종시에 편입시켰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혜택은 고사하고 시세(市勢)의 급속한 위축이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하여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공주시의회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하여 7월 31일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을 공주시까지 확대할 것’ ‘세종시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공주시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 ‘양도시가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 이렇게 3가지를 요구하였다. 이것은 지금껏 세종시 발전에 누구보다도 크게 기여한 공주 시민의 당연한 요구이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는 요구다.

행정수도 완성의 목적은 무엇인가?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다. 이 두 가지는 결국 대한민국의 어느 한 지역도 국가발전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옆 공주시와 시민들이 소외와 차별받는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다시 한번 세종시 행정수도의 완성과 공주시 상생발전을 기원하는 바이다.